

OECD 가입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송 병 록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있다. OECD 가입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개도국으로서의 혜택들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 큰 시장개방 압력과 선진국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크게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던져져 있다.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가 연내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서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식민지배속에 꺾박받던 나라, 6.25 전쟁의 황폐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나라가 이제 배타적이기만 하던 선진국들의 경제협력체제에 끼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만 하다.

우리는 현재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규모와 교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의 일원이라고 자부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그럼에도 OECD 가입은 단지 환상일 뿐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무엇때문일까?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무역의존도가 2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50%에 이른다. 에너지 자립도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기술수준은 직접적인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다.

국내시장의 보호에만 치중해 온 폐쇄적인 시장구조가 외국의 개방압력을 제대로 견디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회, 경제, 정치체제가 성숙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 경제정책의 다자간 규범 설정 문제 등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똑같은 규범을 지키고 선진국형의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갖추어 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다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회원국들과 우리나라는 관심도 다르고 현안도 다르다. 현재 OECD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비대한 정부부문, 힘겨운 사회복지제도로 갈등을 겪고 있다. 무

역에 관한 인식과 관심도 다르다. 자칫 그들과의 융화보다 이질감을 먼저 느껴야 할지도 모른다. OECD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참여와 정면 돌파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있다. OECD 가입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누려 왔던 개도국으로서의 혜택들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 큰 시장개방 압력과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 크게 요구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즉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만이 남아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던져져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OECD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성격과 조직 등에 대한 개요와 가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OECD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한마디로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1948년 미국이 마샬프랜의 효과적 집행을 통하여 전후의 유럽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발족한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유럽경제협력기구)가 확대, 발전되어 오늘날의 OECD가 되었다. OECD는 OEEC의 회원국이던 서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가 참여하여 1961년 9월에 발족되었다. 이후 일본(1964년)과 호주(1971년) 등이 그리고, 최근에는 멕시코(1994년)와 체코(1995년)가 가입하여 총 26개국이 되었으며, 러시아는 OECD와 별도의 협정을 통하여 OECD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 성격 및 설립목적

OECD는 기본적으로 협상이나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기구는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현안과 상호 관심분야를 토론, 협의, 조정하는 클럽형태의 국제경제기구이다. OECD는 WTO나 EU, NAFTA 등과 같이 다자간 협상과 협약에 기초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으며, 회원국들간의 합의를 기초로 운영된다.

설립목적은 협정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통한 세계경제발전에의 공헌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OECD는 경제분야이외의 사회, 교통, 환경, 교육, 노동, 에너지 등과 같은 비경제분야까지도 긴밀하고 심층적인 토의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두뇌집단인 OECD 사무국을 통하여 각종 분야에 대한 통계 작성과 분석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문제도 다루고 있다. OECD는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세계경제의 기본규칙(Rules of the Game)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을 창출시키는 역할을 막후에서 주도해 온 기구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분야와 각종 삶의 질에 관계된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창구를 상설로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OECD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반독립적인 부속기구와 자문기관을 두고 있다.

(1) 이사회(Council)

이사회는 OECD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가 있다. 각료이사회는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연 1회 개최되며 G7 정상회담 이전에 개최하여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에 대한 회원국 상호간의 입장을 사전에 조정한다. 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주재 각 회원국들의 대사들로 구성되며 통상 주 1회 개최된다.

상주대표이사회에서는 각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경제 사회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토의·조정하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여부, 예산승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 사항 점검 및 지시 등 기구의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2)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로서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반위원회가 제출하는 보고서와 제안사항, 자료 등을 이사회 제출전 검토하고 이사회 개최준비를 담당하는 등 OECD의 전반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구이다.

(3) 특별집행위원회 (Special Executive Committee)

1972년 각 회원국의 국제경제분야 고위 담당자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주로 무역자유화와 통화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분야별 전문위원회

집행위원회나 예산위원회 이외에 회원국 대표들의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제정책 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 EPC)등 26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들 전문위원회는 산하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실무작업반(working party)과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을 두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

회와 실무작업반, 전문가그룹에는 상주대표단 및 본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5) 사무국(Secretariat)

이사회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부서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그룹에서 토의될 자료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OECD의 제반 활동을 기획,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외적으로 OECD를 대표하는 사무총장과 3인의 사무처장, 2,000여명의 정규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통계국, 무역국, 금융재정기업국, 환경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6) 기타 조직

OECD내에는 핵에너지기구(NEA)등 분야별 위원회와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과 활동을 위한 반독립적인 부속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가입절차가 신속적이며, 각기 독자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그밖에 OECD는 노동조합자문위원회와 같은 이사회 직속의 민간자문기구도 두고 있다.

다. 가입조건 및 절차

OECD는 선진국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일정소득 이상의 선진국만이 가입할 수 있다거나 하는 제한요건은 없으며, 정치체제 및 경제운용방식이 OECD가 추구하는 가치 및 이념에 부합하는지의 암묵적 요건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인가,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인가를 암묵적인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OECD는 클럽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사회·경제구조 및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는 폐쇄성을 갖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도 만장일치제로 운용되고 있다.

(1) 일반적 준수사항

강제적인 의무규정은 없지만 OECD 회원국들은 자신의 경제수준과 상황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 준수사항으로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OECD의 설립목적을 지지할 것. 둘째, OECD의 제반 규정 및 결정사항, 권고사항, 일반 지침 등에 대한 원칙적인 준수를 수락할 것. 셋째, OECD의 운영비를 부담할 것이 그것이다.

(2) 권고적 의무사항

OECD 가입 희망국에게는 가입전에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이 권고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12월에 IMF 8조국으로 1990년 1월에는 GATT 11조국으로 각각 이행한 바 있다.

GATT 11조는 관세, 조세,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여타 수출입 수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은 ①거주자의 경상거래 결제와 관련한 외화지급의 제한 철폐, ②거래의 종류, 내용, 거래국가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의 철폐, ③외국보유 국내통화의 금 또는 외화등으로의 교환성 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GNP 대비 0.7% 이상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제공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 개발 원조위원회(DAC)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평균적인 ODA 수준은 GNP의 0.33%에 불과하다.

(3) 가입절차

OECD에 가입하려면 먼저, 가입 희망국이 공식적으로 가입의사를 표명,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상주대표이사회가 가입 희망국의 제반의무수락 용의내용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행한 뒤 각료이사회가 사무총장에게 가입희망국과 가입조건을 협의토록 위임한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분야별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에 결과를 토대로 의무 수락내용에 대한 최종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섯번째 단계에서는 각료이사회가 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가입희망국이 필요한 국내적 조치를 취한 뒤 가입문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해야 한다. 이러한 가입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입 희망국의 OECD 제규정의 수락 및 유보내용 등에 관한 양측의 협의결과이며, 가입에는 통상 1년 내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3. OECD 가입에 따른 효과 및 영향

가. 긍정적 효과

(1) 정치체제 및 경제운영방식의 선진화

OECD에 가입하게 되면 OECD의 제반 규범과 선진국의 정책, 제도중에서 바람직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정책과 제도, 규범으로의 수용이 촉진되어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세계경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증대시켜서 우리 경제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지위가 격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선진국의 경험 및 정보의 활용

선진국과의 정보교환, 정책토의 등을 빈번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나 환경, 원자력, 에너지문제 등 주요 현안과제에 있어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의 취득이 용이해져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3) 주요 문제 논의에의 사전적 참여

세계경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현안문제들이

논의되는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그룹에 사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또, 폐쇄적인 지역주의 협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역주의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교역상 대국과 상설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토의 및 대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다자간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참여와 이해 증대를 통해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처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정부부처의 국제화 및 전문가 양성

OECD 26개 위원회등 200여개 기구가 개최하는 연 800여회의 공식, 비공식 회의에 정부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므로 선진국의 정책방향과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토의와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므로 회의에 참여하는 정부관료, 기업가, 학자 등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가 양성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특정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의 쌍무적인압력의 완화

OECD에서는 평상시에 회원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당국자들간의 심층적 토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의 쌍무적 문제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6)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의 질적 향상

OECD 가입은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의 질과 기업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의 확대 등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나. 부정적 효과

(1) 제도개선의 부담

각종 OECD 규정의 수락과 회원국간의 빈번한 정책

협의 등으로 기존의 제도를 OECD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예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및 자본이용 자유화규약에 포함된 항목의 자유화 조치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2) 경제운영방식의 자율성 감소

경제운영방식의 자율성도 크게 감소될 것이다. OECD 회원국이 주요 정책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OECD에 통보·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토·확인작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경제정책운영상의 자율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3) 개도국으로서의 혜택 축소

지금까지 개도국으로 간주되어 국제사회에서 누려오던 각종 혜택 즉, 환경, 농산물, 일반특혜관세(GSP) 등에서의 혜택 축소와 의무의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

(4)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의 평균수준까지는 ODA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4. 우리의 대응방안

OECD에 가입하게 되면 WTO체제나 통상협상 등과 같이 강제적이고 보복적인 조치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를 국제경제환경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OECD가 회원국 상호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클럽형태의 분위기와 환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들과 유사한 체제를 구축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자유화의 속도를 배가시킬 것이다. OECD의 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의 제도나 정책들을 OECD의 기준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을 것이다. 국민복지와 경제생활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각종

제도나 정책, 재정투자를 국민생활의 질 향상 쪽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들이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OECD의 성격이나 활동, 제반 규정들을 고려할 때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의 제도나 정책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우리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주요 상대국에게 노출시키고 협의해야 한다는 불리함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타의 국제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OECD 가입에 따른 추가적 상황변화들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적절한 대응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에 대비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OECD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자본·외환 거래방식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도입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시기와 절차, 방법을 정하고 이를 점차 확대 적용하여 세계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운영방식 결정 및 정책 수립시 그것이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여타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OECD는 세계경제의 단일시장화를 반영하여 각국이 취하여야 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각종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다.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지원 및 간섭의 최소화, 시장진입 규제에 대한 대내외 장벽의 완화, 공정한 경쟁질서 및 제도의 확립,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이나 경제운영방식이 이러한 규정들과 부합하도록 하고 여타 회원국의 정책이나 경제운영방식, 경제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환경 보전, 소비자 보호, 교육여건의 개선, 여성 근로자의 지위 향상, 여행 자유화 확대 등 국민생활의 질

을 유지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장치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OECD는 이미 이러한 사항들을 명문화하여 회원국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 또는 권고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공공부문의 경쟁법 적용의 확대, 담합행위 및 가격협정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구조의 개선 등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미 밝혔듯이 우리의 제도나 정책들이 무역자유화와 최소규제, 공정거래로 대표되는 OECD의 가치기준에 맞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째,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없애야 한다. 기존의 복잡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를 추진하며, 과도한 수출신용의 금지,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나 인센티브 축소, 철강, 조선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철폐, 덤핑방지 등 다자간 또는 쌍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집중적인 압력이나 보복조치로부터 벗어나는 효과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적용, 원전시설의 제작·운영과 관련된 안전의 강화, 소비제품의 recall제 확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관련법의 개정 등 OECD 가입에 따라 당면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준비하여 시행해야 한다.

일곱째, 우리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서 기술 투자의 확대와 경영혁신, 인력개발 등에 대한 노력의 배가가 있어야 한다. OECD 가입은 과거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경쟁제한,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스로가 외국의 우수기업들과 경쟁하여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에 옮기려는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정보수집과 정보교환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세계시장의 단일화 추세가 가속될수록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도도 더욱 커질 것이고,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OECD에서의 논의는 대부분 회원국들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이며,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내용들이다.

또, 이러한 논의사항중 상당부분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유익한 것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각 관련분야에서 OECD의 주요 동향과 토의사항들을 신속하게 수집, 교환, 평가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OECD내 각종 위원회활동이나 토의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들의 능력 여하는 우리의 위상과 의사반영의 정도를 가늠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OECD에서 활동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정부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5. 끝내는 말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WTO체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뜻을 올렸다. 교통과 정·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 전역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어 가는 대변혁을 맞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있으며, 변화의 주역으로서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OECD 가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요원할 것만 같았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자부심과 기쁨이 우리를 들뜨게도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OECD 가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들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정비하려는 노력, 복지와 환경, 노동문제와 경영 전략 등을 개선시키려는 개인, 기업, 정부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만을 강요하는 환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OECD의 각종 결정사항이나 권고사항, 각종 협의내용들중 일부는 사실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들이다. OECD 가입은 시장개방의 확대 및 거래질서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정부지원의 감소 등 단기적으로는 기업이나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 과정이며 우리 경제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변화의 폭이 크면 클수록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부침도 크다.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 성공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의 명암도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과거의 관행과 보호의 틀을 고집하는 자, 그리고 향수하는 자에게 있어 변화는 고통이외의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다. 변화를 예지하고 준비하는 자, 대응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 모두 OECD 가입이 성공과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이다. **A**

